

“불체포권리 포기...영장청구시 심사받을 것”

이재명 “尹 정권 압·구·정... 정치수사 특권 포기”

본인 사법리스크·민주 방탄 비판에 대한 대응 차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저를 향한 정치 수사에 대한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혀겠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 1년이 넘도록 검증을 총 동원해서 없는 죄를 만드느라 끈

연자를 회유 협박에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이미 간파하고 계신다.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상대에게만 사정 칼날을 휘두르면서 방탄 프레임에 가두는 것이 바로 집권여당의 유일한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를 겨냥해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을 해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의 전현직 공직자들을 무방식으로 전수조사하고 강도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계속 하고 있다”며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분열을 노리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며 “저를 향한 저들의 시도를 용

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다”며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압·구·정’ 정권의 그 실상을 국민들께 드러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질식해 위험에 빠졌다”며 사정기관의 수사 및 감사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 대표는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찰은 우리 대통령을 지킨다면서, 국민을 향해 쉽게 칼을 휘두른다”며 “일장찬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권익위와 선관위를 무릎을 꿇리겠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난이

결코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표의 이날 불체포특권 포기 발언은 검찰이 추가 영장을 청구할 경우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는 것으로, 비명계가 ‘사법리스크’로 당에 부담을 주지 말라는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신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과정에서 나온 ‘방탄’ 비판에 대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8월 이 대표가 취임한 이후 민주당은 자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4건을 모두 부결시켰다.

이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왜 이 시점에 결단했는지 묻는 질문에 “정쟁이 아니라 정치를 해야 되고, 당이나 정치 집단들의 이익이 아니라 민생과 나라 살림을 챙겨야 될 때가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문제로 논란이 되지 않기를 바랐다”고 답했다. /뉴스

역대 민선 광주시장들 경험·지혜 한자리에

초청 간담회...광산업 활성화·인공지능 특화도시 등 강조



19일 오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민선8기 1주년을 맞아 강기정 시장이 역대 민선시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역대 민선 광주시장들이 광주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았다.

광주시는 19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역대 민선시장들을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민선8기 1주년을 기념, 광주의 미래 계획을 공유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고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역대시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민선7기 초반인 2018년 9월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간담회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민선2기 고재유 시장, 3·4기 박광태 시장, 5기 강운태 시장, 7기 이용성 시장 등이 참석해 광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강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역대 시장들이 광주발전의 길을 닦고 개척해준 것을 토대로 새로운 광주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어 배일권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이 ▲광주다운 통합돌봄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구축 ▲제14회 광주비엔날레 ▲군공항 이전사업 등 민선8기 광주시 주요 시정에 대해 설명했다.

고재유 전 시장은 “2000년 시작한 광산업이 민선3~7기를 거쳐 꾸준한 발전을 했다. 당시 70여 개에 그쳤던 관련 기업이 현재 300여 개에 달하고, 종사자도 8000여 명에 달한다”며 “관련 지원법이 최근 마련된 만큼 더욱 활성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광태 전 시장은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시정을 잘 펼쳐주시길 바란다”며 “시민을 하늘처럼 받들고,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 잘사는 광주를 만들어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강운태 전 시장은 “비엔날레를 매년 찾아가고 있는데 올해는 작품은 물론, 시내 곳곳에 설치된 파빌리온과 주제 등 모든 것이 잘 구성된 것 같다”며 “올해 비엔날레 주제인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처럼 민선8기 시장이 시민을 부드럽고 여리게 모시면서 내실은 강하게 가져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광주가 인공지능 대표도시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광주과학기술원 등 지역대학과 협력해 경쟁력있는 기술 개발 등도 추진, 광주가 인공지능 대표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뛰어달라”고 말했다.

이용성 전 시장은 “광주가 전환경주동차부품 클러스터를 통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성공시키는데 이어 인공지능 대표도시로 자리매김한다면 광주의 일자리는 환히 열리게 될 것”이라며 “인공지능산업을 특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강 시장은 “역대 시장들의 노고 잊지 않고 새로운 광주시대를 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청 전 시장은 개인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김도기 기자

내달 조국 항소심

‘조민 장학금’ 우선 심리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정식 재판이 내달부터 시작된다.

19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과 정경실 전 동아대 교수 등 5명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오는 7월 17일 이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날 열린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 등 피고인 모두 재판에는 불출석했다.

내달 첫 공판을 시작으로 재판부는 매월 셋째주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혐의 중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혐의에 대한 심리를 가장 먼저 진행할 계획이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2개로,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차명주식 보유(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검찰 무마(직권남용) 등으로 나뉜다.

1심은 딸 조민씨에게 지급된 것으로 알려진 장학금 600만원에 대해서 뇌물 혐의는 무죄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조 전 장관 부부의 백지신탁 의무 미이행, 재산 허위 신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증거를 해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조 전 장관 부부가 제3자를 통한 증거인멸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본 1심 판단도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수능주관’ 이규민 평가원장

전격 사임...‘심려 끼쳐 쇠송’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원장이 19일 사임했다.

이 원장은 19일 오후 평가원을 통해 “저는 6월 모의평가와 관련해 기관장으로 책임을 지고 사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사임이 “2024학년도 수능의 안정적인 준비와 시행을 위한 것”이라며 “오랜 시간 수능 준비에 힘써어주고 계신 수험생과 학부모님께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수능 6월 모의평가 출제 관련 교육 및 출제 당국을 문책한 지 나흘 만이다.

평가원은 “수능 출제라는 본연의 업무에 전념해 올레 수능이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장관 사퇴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동관에서 건설노동자 등 양회동 열사의 분신과 관련해 음모론을 제기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의 사퇴와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생력있는 지역문화, 상생으로 활력 주춧돌 삼아야”

광주전남연구원, 행정구역 너머 문화적 상생 필요성 제기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상생으로 지역문화의 자생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전남연구원은 19일 ‘광주·전남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연구 보고서를 통해 각기 상이한 광주·전남의 문화환경을 진단하고, 새 정부 지역문화 진흥정책의 추진 방향 분석을 통해 지역에 문화적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역점과제를 제시했다.

연구원은 우선, 광주의 경우 ‘지역’ 개념의 재정립을 통해 지역을 지리적 근접성보다는 지역간 연결성이 중요한 네트워크 공간으로 인식함으로써 문화예술 생태계를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문화예술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문화민주주의와 연대를 통해 문화상품의 생산자, 소비자 등이 문화주권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이와 함께 “지역 차원의 성장적 접근을 통해 문화 향유의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며 “전남 문화진흥을 위한 상위계획으로서의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의 위상 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제는 문화기반시설 건립에서 문화시설의 질적 지표 개선을 위한 중장기 목표 수립이 필요하고, 나아가 전남도민의 문화향유 제고를

위한 기초자치단체별로 작은영화관, 작은미술관 등 작은문화시설 건립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원은 특히 “무엇보다 광주·전남 지역 상생과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행정 경계선’을 넘어서는 문화적 협력사업을 도모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협력사업을 바라보는 행정의 고정화된 인식과 태도가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양 지역 간 문화협력의 시작 사업으로 광주비엔날레와 전남 국제수목비엔날레 등 지역 문화프로그램을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광주·전남의 문화 관련 기관들이 주축이 돼 실질적인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적극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김도기 기자

尹, 프랑스·베트남 순방길...엑스포 유치 총력

BIE 총회 참석...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프랑스와 베트남 순방 일정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 여사와 함께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이용해 프랑스 파리로 출국했다.

성남 공항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과 정부 측의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장호진 외교부 1차관 등이 나와 윤 대통령을 배웅했다.

또 응우옌 부 풍 주한 베트남 대사, 줄리앙 카츠 주한 프랑스 대사 대리 등도 함께 자리했다.

어두운 남색 정장에 하늘색 넥타이 착용한 윤 대통령은 환송 인사

한명현명과 악수한 뒤 전용기에 탑승했다. 흰 정장 재킷에 하늘색 행커치프, 하늘색 치마를 입은 김 여사를 뒤를 따랐다.

윤 대통령은 오는 20~21일(이하 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 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직접 참석해 영어로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하며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20일 프랑스 대통령 궁인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한편 이번 순방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뉴스

“수능 ‘킬러문항’ 출제 배제...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당정 “킬러문항 없애고, 난이도 확보 위해 기법 고도화”

정부와 여당이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킬러문항)은 수능에서 출제하지 않기로 했다.

또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자율형사립고등학교·외국고등학교·국제고등학교 등은 존치하기로 했다.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의 출제를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 확보되도록 기법을 고도화할 것”이라며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모든 가

능한 지원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간사는 “공교육 과정에서 담지 않은 킬러문항은 변별력을 높이는 쉬운 방법이라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몰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사교육 도움이 필요 없도록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내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학생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EBS 활용한 지원을 강화하고, 돌봄 지원하고 교육격차가 완화할 수 있도록 방과 후 과정에 대한 자율수강권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한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존치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며 “지역의 자율적인 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능입시 대형학원의 거짓 광고로 인해 학부모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거짓광고 등 일부 학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쉬운 수능’ 논란은 지난 15일 이후 교육부 장관이 “윤 대통령(이)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전달하며 촉발했다.



이태원